

재정패널 소식지

2020년 제1호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재정패널 — 소식지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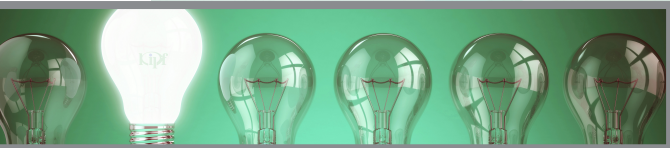
2020년 제1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2020년 제1호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06
재정패널 상반기 소식	08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11
2018~2019 재정패널 활용 연구 요약	20

재정패널 소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20년 현재 13차년도 조사 준비 중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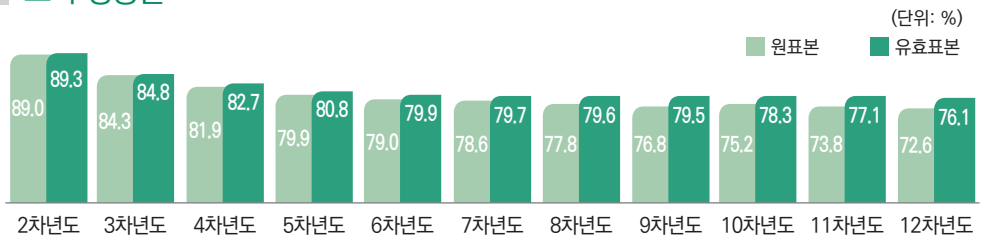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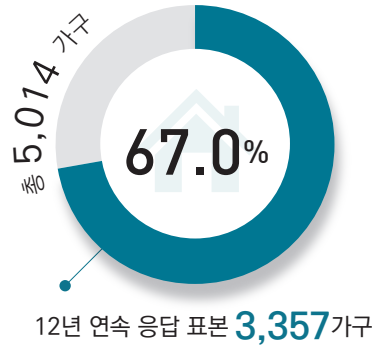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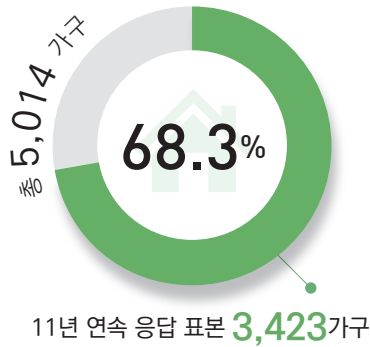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조사 성공률



-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사망, 해외이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문의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044-414-2473/2394
panel@kipf.re.kr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재정패널 공식자료

- 1) 제공 범위: 1-11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2)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3) 2020년 3월 현재, 13차 재정패널 조사 준비 중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개편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SMART NaSTaB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SMART NaSTaB이란?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한 STATA 프로그램

SMART NaSTaB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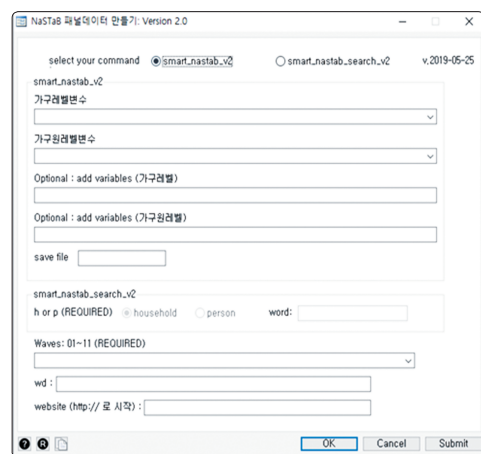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SMART NaSTaB(다운로드)

SMART NaSTaB 이용

- STATA 13.0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 대화창을 통한 SMART NaSTaB 이용화면 >

재정패널 상반기 소식

재정패널 이슈

- 11차년도 재정패널 공식 자료 공개
 - 2019년 12월, 11차년도 재정패널 자료가 홈페이지(kipf.re.kr/panel/)에 공개되었습니다.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13차년도 재정패널 현장 조사 실시
 - 2020년 13차년도 조사가 5월부터 진행됩니다.
 - 패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사 소식

- 2020년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 개최 일시: 2020년 4월 3일(금) 14:00~16:30
 - 개최 장소: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
 - 참가 접수: ~ 3월 27일(금)
 - 참가 접수 방법: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데이터설명회 에서 참가 신청서 접수

논문 모집

-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원고 모집
 - 2020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할 우수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연구계획서 모집기간: ~ 4월 24일(금)
 - 참가 신청 방법: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술대회 에서 연구계획서 제출

2020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2020. 4. 3. (금) 14:00~16:30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강사
13:00~14:00	등록	
14:00~14:15	재정패널 자료 소개	내부 연구진
14:15~14:45	재정패널 자료 구성 및 유의사항 안내	내부 연구진
14:45~15:00	휴식	
15:00~16:30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방법론 강의	명지대 우석진 교수

신청방법

- 재정패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접수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데이터 설명회)
- 신청 마감: 2020년 3월 27일 (금)

문의

- 재정패널 DB 사업팀
- ☎ 044-414-2473/2394
- ✉ panel@kipf.re.kr
- 🌐 <https://www.kipf.re.kr/panel/>

기타 안내사항

- 참가비용 없음
- 주차권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오시는 길





일반연구자 학술대회

- 대상논문: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참가자격: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자
- 원 고 료: 논문 제출 후 발표 시 100만원 지급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 대상논문: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 상 금: 최우수상(○편, 200만원)
우 수 상(○편, 100만원)
장 려 상(○편, 70만원)

일 정

- 데이터설명회 : 2020년 4월 3일 (금)
- 연구계획서 모집 마감: 2020년 4월 24일 (금)
- 최종 논문 제출 마감: 2020년 7월 17일 (금)
- 학술 대회 : 2020년 9월 11일 (금)

신청(공통)

- 신청서류: 연구계획서
- 제출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계획서 제출
※ 12차년도 조사 항목 및 논문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문의 : 재정패널 DB 사업팀

☎ 044-414-2473/2394

✉ panel@kipf.re.kr

🌐 <https://www.kipf.re.kr/panel/>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재정패널
소식지

표본 구성

• 11차년도 표본구성

(단위 : 가구)

구분	최초 표본가구	추가 표본가구	2-10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2017년 6월 이전 분가가구	2017년 7월 이후 분가가구	총합계
전국	3,664	493	583	30	46	4,816

* 2017년 7월 이후 분가가구는 2019년 조사 시점부터 정식 유효 표본으로 인정됨.

• 원표본 가구 유지율

(단위 : 가구, %)

구분	원표본 지역별 가구수	2018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표본가구 유지율
전국	5,634	4,157	73.8

11차년도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4,816가구가 표집되었다. 2008년도에 구축되었던 원패널 가구 중 2018년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157가구로 패널 유지율은 73.8%이다.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유지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표본가구 인구학적 특징

• 가구원 수

(단위 : %)

진행차수(조사시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0차(2017년)	25.2	26.8	24.8	17.8	5.4
11차(2018년)	25.8	27.5	24.5	17.1	5.1

11차년도 조사에서 가구는 2017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 가구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 %)

진행차수 (조사시점)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0차(2017년)	69.7	30.3	3.3	16.0	27.1	17.3	36.4
11차(2018년)	69.3	30.7	4.2	14.9	26.3	17.3	37.3

2018년 전체 가구주 성별 및 연령대 비율을 2017년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 %)

진행차수 (조사시점)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0차(2017년)	46.7	53.3	21.7	9.5	13.9	19.1	12.6	23.3
11차(2018년)	46.6	53.4	21.0	9.8	13.3	19.0	12.7	24.1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 19세 이하 가구원이 그 다음으로 많이 조사됐다.

■ 가구 조사표 결과 요약

• 가구 평균 연소득

(단위 : 만원)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연간 총소득		4,676.0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근로소득	3,134.9	양도소득/손실	
사업소득	887.5	양도소득	2.5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손실	0.6
토지	1.9	보험급여	
주택	57.7	사회보험 급여	117.7
상가 및 사무실	53.4	민간보험 급여	32.5
기타	3.8	정부지원	
이자 및 배당소득	13.3	정부지원 현금소득	89.0
기타소득		퇴직관련급여	
타가구 이전소득	97.2	특수직 퇴직연금	80.3
노인요양특별급여	0.0	특수직 퇴직일시금	15.4
그 외 기타소득	57.4	개인형 퇴직연금	0.4
		개인형 퇴직연금(일시금)	31.1

재정패널 표본가구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을 구하기 위해 가구원 조사표에서 조사된 연간소득의 총금액을 총 유효표본 가구 수(4,770가구)로 나누어 보았다. 분석 결과 재정패널 조사 표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676.0 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근로소득이 평균 3,134.9만원이었으며 사업소득이 887.5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가구 금융자산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
	비율	평균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76.9	3,679.1	2,835.2
펀드 가입 금액	3.2	3,168.2	101.4
채권 보유 금액	0.2	9,749.7	23.2
주식 보유 금액	6.1	5,080.0	311.8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11.7	2,433.3	284.1
연금저축	8.8	6,961.0	612.3
빌려준 돈	1.2	5,012.5	58.9
기타 금융자산	0.6	15,081.1	97.7
금융자산 총액			4,324.6

금융자산 중에는 금융기관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6.9%로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4,324.6만원으로 나타났다.

• 가구 부동산자산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
	비율	평균 금액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54.2	27,448.5	14,890.4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10.7	33,099.4	3,542.5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11.3	24,576.8	2,777.2
주택 외 보유 부동산(건물)	2.7	55,458.5	1,477.8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35.3	9,101.3	3,214.6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0.1	4,542.5	6.8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4.0	3,675.1	147.7
부동산 자산 총액			26,057.0

부동산자산 중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2억 6,057.0만원으로 나타났다.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가구 부채

(단위 :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비율	평균 금액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2.0	6,275.7	122.8
학자금 대출	0.6	1,333.2	8.7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16.4	10,606.8	1,739.0
금융기관 대출	11.1	6,832.1	759.4
신용카드 대출	1.3	2,358.0	31.6
전세금/보증금	12.1	11,986.2	1,448.7
기타	1.0	5,564.3	56.0
부채 총액			4,166.1

부채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세금/보증금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4,166.1만원으로 나타났다.

■ 가구원 조사표 결과 요약

• 소득활동 현황

(단위 : %)

소득 활동함		소득활동 하지 않음	
78.3		21.7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직	비구직
71.2	28.8	8.8	91.2

•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구분	세부항목	분포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자	54.2
	임시직 근로자	10.5
	일용직 근로자	6.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0
	고용원을 둔 사업주	3.1
	무급 가족 종사자	3.7
근무시간 형태 (임금근로자)	전일제	89.7
	시간제	10.3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78.3%로 나타났고, 그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1.2%,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8.8%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정부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는 21.7%로 나타났다.

• 가구원 연간 소득

(단위 : %, 만원)

항목	소득 가구원		조사 가구원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근로소득	59.7	3,314.1	1,978.8	
사업소득	20.2	2,763.0	559.1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3	450.3	1.1
	주택	4.0	931.2	37.5
	상가 및 사무실	1.6	1,850.1	30.1
	기타	0.1	1,776.6	2.4
이자 및 배당소득	2.3	401.1	9.2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11.9	537.1	63.8
	노인요양특별급여	0.0	0.0	0.0
	그 외 기타소득	3.3	1,111.6	36.9
양도소득 /손실	양도소득	0.3	779.1	1.8
	양도손실	0.3	1,327.5	0.3
보험급여 /정부지원 /퇴직급여	사회보험 급여	13.1	530.5	69.4
	민간보험 급여	4.3	417.4	18.0
	정부지원 현금소득	19.8	265.0	52.4
	특수직 퇴직연금	1.5	2,766.6	41.8
	특수직 퇴직일시금	0.1	9,460.9	7.1
	개인형 퇴직연금	0.0	845.0	0.3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0.8	2,167.7	18.0
연간 총소득			2,927.7	

가구원 개인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조사 가구원의 평균 연간소득은 2,927.7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3,31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가구원 의식조사 결과요약

• 조세·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 본인 세부담 평가

(단위 : %)

구분	항목	분포
본인 경제적 능력 대비 세부담 평가	매우 많이 납부한다	4.5
	약간 많이 납부한다	33.6
	적절하게 납부한다	56.3
	약간 적게 납부한다	4.3
	매우 적게 납부한다	1.3
본인 납부 세금 대비 정부 혜택 평가	매우 높은 수준	1.4
	약간 높은 수준	11.7
	적당한 수준	47.3
	약간 낮은 수준	31.6
	매우 낮은 수준	7.9
소득 유사 그룹 대비 본인 세부담 평가	매우 높은 수준	3.8
	약간 높은 수준	32.4
	적당한 수준	58.9
	약간 낮은 수준	4.2
	매우 낮은 수준	0.7

본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 나왔으며,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정부의 혜택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인 47.3%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혜택이 낮은 수준(약간 낮은 수준 +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9.5%로 그 뒤를 이었다.

▷ 소득격차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항목	분포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크다	35.9
	약간 크다	52.8
	보통이다	10.9
	별로 크지 않다	0.4
	전혀 크지 않다	0.1

구분	항목	분포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커질 것이다	40.0	
	약간 커질 것이다	49.0	
	보통이다	10.2	
	약간 작아질 것이다	0.8	
	매우 작아질 것이다	0.0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정부 정책 ↑ ↓ 개인 노력	①	29.7
		②	39.3
		③	23.9
		④	5.9
		⑤	1.2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 88.7%(매우 크다+약간 크다)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9.0%(매우 커질 것이다+약간 커질 것이다)로 조사되었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0%(①매우 중요+②대체로 중요)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단위 : %)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	바람직한 수준
저부담 - 고복지	2.1	8.8
중부담 - 고복지	7.3	27.7
고부담 - 고복지	1.5	4.8
저부담 - 중복지	12.7	13.8
중부담 - 중복지	34.9	39.1
고부담 - 중복지	7.6	2.0
저부담 - 저복지	6.9	1.2
중부담 - 저복지	22.0	2.3
고부담 - 저복지	5.0	0.2

세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중부담-중복지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납세 관련 태도

▷ 위험회피

(단위 : %)

A. 예금상품	B. 펀드상품	비율
0원	1억원	2.6
1천만원	9천만원	2.8
2천만원	8천만원	2.6
3천만원	7천만원	4.5
4천만원	6천만원	5.0
5천만원	5천만원	12.5
6천만원	4천만원	5.3
7천만원	3천만원	9.4
8천만원	2천만원	8.1
9천만원	1천만원	7.7
1억원	0원	39.6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묻는 질문에서 1억원을 모두 예금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고, 5천만원씩 예금상품과 펀드상품에 나눠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2.5%로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출산 관련 부가조사

11차년도에 진행된 부가조사는 1998년 이후 결혼 또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원의 출산관련 지원제도 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부가조사 응답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1,833명으로, 가구원 조사 응답자 수의 23.0%로 나타났다. 아래의 조사 외의 출산 전 사업내용 및 총사상 지위, 출산 전후 일자리 변경 현황, 자녀 출산 후 일시적 실직상태에서의 생활비 마련 방안 및 필요 소득 등에 대한 내용은 '11차년도 기초 분석보고서'에 제시되었다.

▷ 1998년 이후 출산 여부

(단위 : %)

예	아니오
43.2	56.8

출산 경험이 있는 가구원 중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원은 43.2%이며, 없는 가구원은 56.8%로 나타났다.

▷ 출산 전 소득활동 유무

(단위 : %)

예	아니오
37.7	62.3

출산 가구원(자녀의 어머니) 기준으로 출산 전 소득활동을 하고 있던 가구원은 37.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2.3%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관련 지원제도 이용

(단위 : %)

제 도	제공 여부	사용 가능 제도	실제 사용 제도
출산 전후 휴가	30.6	50.1	51.4
육아휴직	28.0	42.7	39.7
근로시간 단축제	4.1	2.9	2.3
탄력 근무제	3.3	1.8	1.5
난임휴가	1.2	0.3	0.0
직장 내 탁아시설	1.2	0.5	0.2
없음	31.5	1.7	4.9

* 지원제도 제공 여부, 즉시 사용 가능 제도, 실제 사용 제도는 복수 응답임

** 지원제도 제공 여부는 소득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 사용 가능 제도는 지원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 실제 사용 제도는 사용 가능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출

출산 관련 지원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로 가장 많았고, 지원제도 중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로 나타났다. 지원제도 중 사용 가능 제도로는 출산 전후 휴가가 50.1%로 가장 높았고, 실제 사용 제도 역시 출산 전후 휴가가 51.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이 유	출산경험 없음	출산경험 있음
경제적 부담	4.8	37.7
(추가로) 출산하기에는 나이가 많음	2.9	10.1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 어려움	2.7	7.4
육체적·시간적 여유 없음	10.7	3.3
시도했으나 생기지 않음	25.6	2.7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9.2	32.3
머지않은 미래에 출산 계획 중	39.9	5.5
기타	7.2	0.8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출산경험이 한 번도 없는 가구원의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출산 계획 중'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산경험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재정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이 동일한 패널조사로, 현 연도와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정패널 홈페이지(kipf.re.kr/panel/)에 게시되어 있는 '11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18~2019

재정패널 활용 연구 요약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초록입니다. <편집자 주>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 -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강남훈

『사회경제평론』 32(1): 1-27

이 글에서는 2015년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추가되는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때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천분위 자료에 나온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4739이었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지니계수가 0.4534로 변해서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0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순수혜자가 된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 패널 데이터로부터 가구원수 및 근로소득자수별 가구분포 모형을 만들고 천분위 자료의 무작위 순열을 가구분포 모형에 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평균 1,520만원이었고, 지니계수는 평균 0.6478이었다. 현재의 근로소득세 정책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에 비교하여 평균 1.22%p 낮추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은 지니계수를 평균 6.93%p 낮추었다. 순수혜 가구의 비율은 평균이 65.4%였고, 순수혜가구원의 비율은 평균이 64.98%이었다.

기부금 공제제도의 지출행태 영향 분석

강병구 · 박용재

『재정정책논집』 21(4): 3-27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10차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전환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추정을 통해 기부자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통해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변경이 기부금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고,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에서의 변경이 기부금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났고, 공제혜택이 줄어든 고소득계층에서 기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세액공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공제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세지원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기부행위의 효과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성향과 보험수요의 이론 및 실제

김대환

『보험금융연구』 30(4): 63-86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보험경제학 이론의 개발 이후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론을 증명해 온 선행연구들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설문문항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설문문항이 존재하는 동시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위험회피성향이 개인의 실제 위험회피성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분석한 결과와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한 결과, 위험회피성향 변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설문문항만으로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차원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향후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재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추정한 자산보유 선택행위

김병우

『산업경제연구』 32(6): 2133-2159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가구별 예적금, 펀드 등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다. 금융자산별 보유금액에 대한 토빗(tobit)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구의 경상소득과 보유 주택자산의 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수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금융자산으로 주택관련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장가치가 커질수록 주택금융상품 보유금액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소득의 증가는 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구의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 선택에서, 우리나라 가구는 주택자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금액도 같이 늘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펀드, 주식, 보험, 주택 관련상품 등을 들 수 있다. 보유금액뿐만 아니라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살펴보았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계 위험부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부동산시장을 통한 간접적 효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조세 등 정부정책이 가계의 위험부담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향후, 금융자산 보유와 소비지출에 이르는 가구행태에 일반 거시경제변수나 가구특성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변수와 주택보유기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은미 · 김상봉

『부동산분석』 5(3): 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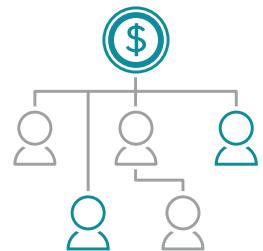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주택보유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주택보유기간으로 두고, 가구연소득, 총 자산, 자산대비 부채율, 평당가격, 가구주연령, 소비자물가지수, 주택준공실적,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시경제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생존분석의 와이블 분포를 적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자가 거주'로 제한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로 구분하였다. 가구연소득과 총자산의 증가는 거주주택 외 주택비소유자의 주택매각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보유기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주택 외 주택소유자는 가구연소득과 총자산이 아닌 자산대비 부채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매각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된 거시경제변수는 모두 주택보유기간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결과 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및 정책이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주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박명호

『예산정책연구』 8(1): 101-121

본 연구는 제10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도 주택분 보유세 강화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세부담의 전가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0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을 분석한바, 보유세 부담은 역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를 강화하고, 세부담을 높인 9.13대책을 반영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또한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니계수의 변화를 분석한바, 금번 보유세 강화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들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체계가 누진적임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귀속임대소득의 포함 여부는 소득분배 지표의 크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였다. 이는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이 그렇지 않은 소득보다 생활수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비교분석 -정책수단 및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형수

『재정학연구』 12(3): 67-105

본 연구에서는 복지수혜와 조세부담의 어떤 항목이 재분배에 더 효과적인지, 또 그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큰지 여부를 현물급여와 간접세를 포함해 실증분석해 보았다.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및 재정패널조사, 영국 및 호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수단별로 지니계수 개선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정책 규모와 누진도로 분해하여 정책수단별 효과성 및 효율성을 상호비교하고 국제비교했다. 또 LIS 및 CEQ 자료를 이용해 다른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과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재분배 효과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물론 다수의 개발도상국보다도 작은 것은 현금급여와 직접세 규모가 작고 현물급여의 수혜가 저소득층에 충분히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재분배 효과성과 효율성은 현금급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물급여와 직접세 순서였으며, 간접세가 가장 낮았다. 현금급여에서는 기타 현금급여의 누진도가 공적연금보다 재분배에 유리했는데, 특히 기초연금이 그러하였다. 간접세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역진도가 낮았지만, 직접세에서는 큰 역할을 해야 할 소득세의 세수가 작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도가 낮은 문제도 발견되었다. 현물급여가 규모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매우 작았던 것은 규모가 가장 큰 교육 서비스의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집중도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송헌재 · 고선 · 김지영

『유라시아연구』 16(3): 123-140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은 보통 개인의 자원 활동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민간기부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기부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기부 행동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미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부활동의 성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민간 기부단체, 국세청, 통계청 등은 각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 총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단위 기부 총액에 대한 추계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에 8.6조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이 적용된 2014년에 8.2조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2016년에는 11.7조원에 이르렀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 이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현금 및 보시목적의 종교기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30%정도 크고,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추계치의 약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선목적의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와 유사했다.

재정패널을 이용한 추계결과와 기존 추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는 이유로는 재정패널 표본의 대표성, 설문방식의 문제점, 기부금을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신뢰할만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다. 앞으로 재정패널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신유정 · 전병욱

『세무학연구』 36(4): 9-35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대규모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회피성향 관련 자료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를 제공해서 선행연구에 비해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구모형에서 주된 설명변수인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무위험자산 및 위험자산의 투자비율과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부로 측정했고,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은 각각 세무조사 기피 정도 및 현금매출 신고 정도로 측정했으며,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가구 금융자산을 포함했다.

10차연도(2016년) 및 11차연도(2017년)의 14,250개 가구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먼저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도 세무조사 기피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이러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비사업자에 비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시 세무조사를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2019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요약

다음으로,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통한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금매출의 과소신고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이 높아서 장래의 과세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현금매출 신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우 낮은 세무조사 확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비율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장래의 가능한 높은 처벌수준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장래의 세법상 불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이선화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65-85

조세지출은 기능적으로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직접 예산으로 사전 편성되는 재정지출과 달리 경제행위의 산물로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예산서 작성을 위한 지출규모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방법론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방세지출 역시 국세로 구성되는 조세지출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로 운영된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 감면통계를 이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지출 추계치의 차이를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추계방법론으로는 세수손실법, 세수증가법, 세수 관측치 비교법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세수손실법에 의한 세수효과(절대값 기준)는 조세정책에 따른 순세수효과를 추계한 세수증가법보다 조세정책의 세수효과를 과다추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측된 세수의 경우 조세정책 외에 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한 세수변화분을 포함하므로 세수손실법 또는 세수증가법에 의한 추계치와 비교하여 그 절대효과가 클지 작을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유류의 가격구조가 휘발유·경유차량 간의 유형 선택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심리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전병욱

『세무학연구』 36(4): 95-120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취득차량의 유형 등을 바탕으로 상반된 측면의 요인인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휘발유 및 경유 차량 간의 취득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휘발유 차량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지불의사액(W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반대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유보의사액(U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분석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가격에 반영되는 현실의 상황과 함께 유류세가 없는 가상적 상황을 구분해서 수행하였다.

5차연도(2011년)부터 10차연도(2016년)까지의 분석대상 기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현실의 상황 및 가상적 상황에서 모두 휘발유 차량 선택시 동일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추가적 연료비 부담(CO2EXP)이 증가할수록 휘발유 차량의 취득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해서 취득차량 유형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비해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 연료비 부담(CO2EXP)과 유류비(LNOIL)의 결합변수도 종속변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서 추가적 연료비 부담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유류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역시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취득차량 유형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비해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휘발유 차량의 취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휘발유 차량 선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취득자들이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휘발유 차량 취득자들이 요청하는 소비자가격의 심리적 인하 정도가 인하요청 유보의사액(UTP)인데, 유류세가 부과되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리터당 11.55원 - 14.29원으로 나타났고, 유류세가 없는 가상적 상황에서는 리터당 21.04원 - 39.89원으로 나타났다.



조세 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정도호 · 김창진 · 배수호

『국가정책연구』 33(3): 43-72

본 연구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활용하여 조세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납세자의 납세태도 결정요인을 예측·확인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태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조세순응의 이론 중 ‘미끄러운 경사이론’에 기반을 두어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강요된 순응과 자발적 순응으로 구분하여, 납세태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년도 재정패널’ 자료이다. 분석은 서열 로짓 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과 신경망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서열 로짓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요된 순응은 납세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발적 순응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신경망을 근거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세금 집행에 대한 신뢰,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수평적 형평성 인식, 일반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인 납세태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실한 납세태도를 위한 정책형성에 있어 기존의 납세유도 정책과 함께 세금 집행과 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환경 조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정의철

『주택연구』 27(3): 41-75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적 특성을 선택 대안별 상수항의 확률효과로 처리하고 확률효과항간의 상관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중로짓모형에 내재된 IIA 가정을 완화하는 확률효과 다중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가구가 선택하는 주택점유형태를 자가점유, 전세,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한국노동패널 13차년도(2010년)부터 20차년도(2017년)까지의 가구자료를 통해 가구주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가구와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통합자료를 이용한 통상적인 다중로짓모형 추정 결과에 대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IIA 가정이 기각되었으며, 확률효과 다중로짓모형 추정 결과 확률효과항의 분산과 공분산 추정계수가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 대안간의 독립성을 가정한 다중로짓모형보다 선택 대안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확률효과 다중로짓모형이 더 적절한 분석 방법임을 제시한다. 확률효과 다중로짓모형 추정 결과에 기초한 한계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선택은 가구주 연령 만 60세 미만인 가구에 비해 순자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증대와 대출금리 인하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0. 3. 9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394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